

광주경찰, 잇단 물의에 자성 목소리

파출소 내 피의자 관리 소홀...7시간 도주극까지 이어져 '상습 갑질 의혹' 사실로 드러난 과장급 경관 징계 유력

광주 지역 경찰관들이 피의자 관리 소홀, 부하 직원 갑질, 근무 태만 의혹 등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책무를 소홀히 하는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조직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하고 도주 사실조차 지연 보고한 하남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과 팀원 2명(경위·경사)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앞서 소속 관서인 광산경찰서 청문 감사관실은 갑질 조사를 벌여 A경감 등 경찰관 3명이 피의자 관리 관련 복무 규정·지침을 어겨 과실이 있다고 봤다. 지연 보고 등 후속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A경감 등은 야간근무 중이던 지난 달 27일 오전 4시께 30대 폭행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다 놓쳤으며, 적극적으로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순찰팀장인 A경감 등은

같은 날 오전 5시 15분에야 이 같은 사실을 광산서에 보고했다. 1시간 15분을 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B씨에 대한 대규모 추적 경력 투입도 제때를 놓쳤다.

광산서 형사팀이 뒤늦게 투입, 도주 7시간 만에야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다.

광주경찰은 A경감 등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하 직원에 갑질 횡포를 부린 의혹이 불거진 광주 동부서 과장급 B경정도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검찰 조사 결과 B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직분을 넘어선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경정은 일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으나, 광주경찰은 '중징계가 필

요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B경정은 경감이던 지난 2014년도 비슷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정급 이상 경관 징계 의결 처분 절차에 따라, B경정에 대한 징계 양정은 경찰청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근무 태만 의혹에 휩싸인 동부경찰서 소속 C경감도 갑질 조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은 지난 23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C경감 관련 근무 태만 의혹이 담긴 진정 내용을 전달 받았다.

진정인은 'C경감이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주택 단지를 팔던 낮 시간대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 조사가 나선 광주경찰은 진정인과 C경감을 차례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C경감은 "유연 근무제에 따른 오후 4시 이후 조기 퇴근, 주말 당일 근무 뒤 휴일, 법정 휴가 등을 이용해 자택을 드나들었을 뿐이다"며 "양심을 품은 누군가가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백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 경찰관은 "피의자 관리에 실패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직무 소홀·태만에 해당한다.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며 "빠를 짚는 자기 반성 노력과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곤혹스럽다.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지 않도록 갑질 조사·징계가 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광주경찰청 소속 경관의 복무 위반 징계 사례는 32건에 이른다. 계급 별로는 ▲경감 5건 ▲경위 22건 ▲경사·경장 각 2건 ▲순경 1건으로 집계됐다.

임형택기자



순천경찰, 사회적 약자 대상 도전! 안심 골든벨 개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참여형도전! 안심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완도해경, 완도→제주간 여객선 불시 검문검색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최근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와 관련 범죄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완도→제주 통항 여객선을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을지훈련 중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24일 시민위 을지연습 실제훈련(용산차량기지)중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광양소방 광영119안전센터, 추석 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센터장 황화연)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소방,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 참여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25일 여수소방서 앞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서 구조대, 비바람에 쓰러진 거목 안전제거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비바람의 영향으로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한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안전하게 제거했다.

담양=박종영기자

'24시간 운영' 광주해바라기센터, 야간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공백

최근 2년 반 야간 의료공백 전국 9개 센터 중 광주 두 번째로 높아

성폭력 피해자들이 24시간 지원 하는 광주 해바라기센터가 야간시간 전담의사가 없어 피해자들이 증거물 채취를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해바라기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24시간 밀착 지원하기 위해선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해바라기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 30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담당의사가 없었다. 센터는 지난 4월 인력을 충원했지만, 최근 또 공석이 되면서 사실상 심야시간에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의사가 다시 빈 상태다.

게다가 센터 측은 이달 14일 장기 휴가를 떠난 의료진의 자리를 열흘간 메꾸지 않았다. 지난 24일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야간시간 대 산부인과 교수·응급실 전공의를 대체

투입하겠다는 뒤늦게 계획을 세웠다.

해바라기센터는 성·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법률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72시간 이내에 신속히 채취해야 한다.

증거물 채취에 필요한 응급키트 과정은 총 12단계가 있는데, 생식기·항문 직장 내 채취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센터 측은 야간시간 대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이튿날 의사가 있는 낮 시간 다시 센터를 방문해 증거채취를 해 달라"고 안내했고, 피해자들은 증거 유지를 위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불편함에도 채취 전까지 피해 상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야 했다.

광주지역엔 해바라기센터를 제외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4곳이 있었

지만 모두 야간시간 대 증거물 채취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제출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야간시간 대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의 응급키트 시행인력'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의사 부재로 지난해 12월-올해 1월 60일, 지난 2월-3월 25일을 합쳐 총 85일 동안 응급키트 지원 공백이 있었다.

전국 9개 센터 중 2번째로 공백기간이 길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 서부 명지병원 106일 ▲광주 조선대병원 85일 ▲서울남부 보라매병원 23일 ▲충주 청주의료원 19일 ▲서울대학교병원 6일 등이다.

센터 측은 야간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전담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광주해바라기센터는 조선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

다. 센터는 증거물 채취가 필요할 경우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원 여부는 병원 인력 상황에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

센터 관계자는 "의료공백을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병원도 산부인과 전공의가 2명 뿐이라 야간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장 피해자들의 증거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증거 유지 안내를 하고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진행을 못할 때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해바라기센터가 24시간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기관이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24시간 지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고통을 지우고 싶은 피해자의 심리·신체적 부담을 해아려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점검은 꼼꼼하게'

28일 오후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귀향 차량 무상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 경찰, 다음달 한달동안 '2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 면제 불법무기 소지·밀거래 신고 시, 최대 500만원 보상

전남경찰청은 불법 무기를 이용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지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 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원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 부대에 방문하면 된다. 불법 무기류를 제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 또는 불법 무기 밀거래 조직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검거 보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소지한 불법 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지니 이를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